

한·미 FTA 청문회 격돌

野 “쇠고기 재협상 없인 FTA 비준 불가”

與 “쇠고기 협상은 盧정권서 시작”
줄속협상·美 관보 오역 논란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 문제로 줄속협상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쇠고기 재협상과 FTA 비준을 연계=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결 조건으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광우병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FTA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 쇠고기 검역과 한미 FTA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쇠고기 재협상과 별개로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쇠고기 줄속협상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선물용”이라며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 조공협상을 초래한 한미정상회담 주책임자인 외교통상부장관을 사

퇴 또는 해임시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쇠고기 협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한미 FTA와 쇠고기 검역절차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쇠고기 청문회로 번질때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역, 줄속협상 논란=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줄속협상과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誤譯)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통합민주당은 정부가 오역 등 문제를 드러내 검역주권을 내주는 등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관련자 문책과 함께 재협상을 통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쇠고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OIE(국제수역기구) 규정 변경에 따라



통합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청문회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도 바뀌었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략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쇠고기 협상 직전인 4월11일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정상회담 직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심야회의 직후 타

결했다”며 “정상회담용 조공, 검역 주권을 팔아먹은 쇠고기 협상 주역들이 매국노 이완용과 다를 게 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미국의 쇠고기 생산, 도축, 유통, 소비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야기한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한다”면서도

“협상조건을 바꿔 굴욕 협상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 양성(반응) 소의 도체 전부를 사료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 반추동물에서 반추동물로만 아니라 간접경로로 가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민영화 검토 방안

이전 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내용
한국전력공사	본사인력 10-15% 감축
한전KPS	유력 민영화 대상기관
한전KDN	민영화 검토
한국전력거래소	미검토
우정사업정보센터	민영화 전 단계 공사화 검토
한국농촌공사	본사에선 3조에서 2조로 삭감
농업연수원	미검토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민영화 및 신하기관인 AT센터(컨벤션센터), 화훼공판장 민영화 검토
저작권 위원회	통폐합 논의 진행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문화예술회원	통폐합 및 구조조정 검토
한국문화재단진흥원	"
한국전파진흥원	미검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농촌경제연구원	"



자료출처=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

■ 공기업 ‘先 민영화 後 지방이전’ 확정

“민영화 돼도 본사는 나주”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라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이 다음달 중반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 KDN과 한전 KPS,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이 이뤄지더라도 본사는 당초 계획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혁신도시 규모 축소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민영화 계획=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60~70개를 민영화, 20~30개 기관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전체 공기업은 250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공기관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립 목표 달성 여부 ▲설립 목표 부합 여부 ▲민간 이익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 6월 중순까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 KPS와 KDN,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으며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원은 통폐합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에서 제외됐으나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촌공사 등과 함께 인력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됐다.

◇대표적 민영화 대상=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지역난방공사와 가스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의 민영화는 시기상으로 보고 자회사인 한전KPS와 KDN, 한국전력기술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민영화도 유력하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관광공사와 수자원공사, 방송광고공사 등은 수익성이 있는 일부 사업 부문만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할=일단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된 공기업은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가 본사 이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매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지역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 민간 기업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둘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이 무산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 산하기관 이전이나 예산 투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슈워브 USTR대표 “광우병 발생땐 수입 중단 ‘한국 입장’ 수용”

(미 무역대표부)

한미 검역주권 인정 구두 합의... 실행 보장 관건

야당 “고시 늦추고 협상에 명문화” 요구 예상

“앞으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미국이 수용함에 따라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에 비해 ‘검역 주권’ 측면의 보완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한국에서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둘러싼 의혹과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자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국의 검역주권을 일단 구두로 인

정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양국 고위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수준인만큼, 이를 확실하게 고시 내용에 반영하자는 야당 등의 재협상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완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검역주권에 대해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답변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검역 보완책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합의문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합의문 4.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는다.

미국에 광우병이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광우병 사태가 터져 한국이 대국민 약속대로 수입을 중단하고 교역상 타격이 깊어질 경우 미국측이 위생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 등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늦추고 이 부분을 명확히 조건에 삽입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실상 재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연합뉴스

조이트레블
 (주) 조이트레블
 대표 전화 (062) 234-3222
 팩스 062-233-5900

**기쁜소식을
조이트레블 특가행사!**
 5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부일당객행방 - 당일 당일 당일

장사/장가게 4일 399,000

1. 장례/장사/장가게 4일 399,000
 2. 장례/장사/장가게 4일 399,000
 3. 장례/장사/장가게 4일 399,000

미혼·30대 초반
 329,000
 359,000
 629,000
 429,000
 769,000
 869,000

**부동산
 399,000**

1,990,000

1. 이태리빌딩 8일 1,990,000
2. 서유림 5개구 11일 2,190,000

대만/이후/하반 4일 699,000

780,000

미국비자 780,000

중국비자 780,000

미사당장사전화: 062-233-5900